통일/평화

20대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기대하는 대북 정책

방 인 성
(사)하나누리 대표

한반도평화정착은 우리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이고 미래 경제, 즉 우리민족의 삶에 대한 문제이다. 남북관계의 발전은 물론이고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대한민국의 경제, 군사력에 걸 맞는 (한국은 주요8개국(G8) 반열에 올라섰으며, GDP는 세계 10위권에 진입해 있고 전 세계 수출비중은 7위에 있고 군사력은 세계6위에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등의 국가들과 동반자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 특히 한미동맹을 새로운 협력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전시작전권의 조건 없는 이양과 유엔사 해체를 통해 군사주권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 이상 한반도가 주변국가의 패권경쟁의 도구로 전쟁의 화약고 역할을 할 수 없다. 오히려 한반도 땅에서 살아가는 미래세대에게 세계평화와 대안경제의 교두보 역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필자는 지난 약 15년간의 북한 방문과 교류협력을 통해 변화하는 북쪽의 모습을 생생히 경험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 우리 사회도 북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은 놀랍도

록 변화하고 있고 2018년 이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은 세계에 이목을 집중시켰다. 아시아 끝, 한반도 북쪽에 있는 은둔의 나라 지도자가 국제무대에 등장함으로 북한이라는 존재를 새롭게 각인시켰다. 3차례의 정상회담 결과는 거두지 못했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북한의 핵 능력을 인정받아 협상의 대상이 된 것만은 분명해졌다. 현 바이든 정부도 현실을 직시하고 대북정책을 펼쳐야하기에 지난 오바마 정부의 대북기조를 그대로 이어 갈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한국의 역할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번 20대 대통령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의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미래에 열쇠를 쥐고 닫을 것인가 열 것인가를 가늠케 된다. 몇 가지 키워드를 통해 대선후보자들의 대북정책에 호소하려고 한다.

종전선언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은 지난 2021년 9월 23일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중에서 " 나는 오늘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합니다.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종전선언을 제안 했다.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로 의미 있는 제안이다. 1953년 7월 27일 미국, 북한, 중국이 정전협정을 맺으며 6 • 25전쟁은 휴전 상태로 7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군사적 적대를 청산하고 평화를 정착시키자는 매우 중요한 제안이기에 북한도 화답했다. 그러나 북측은 정치적 선언에 만족할 수 없는 현실의 경제, 안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종전선언을 넘어 평화협정 체결로 이어지려면 해결되어야할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또한 한반도 종전 선언을 둘러싼 주변 나라들의 속내는 자국의 이익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특히 태평양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줄다리기는 종전선언을 이용하려할 것이다.

남북 관계 뿐 아니라 국제 질서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하여 종전선언을 이루어 내려면 미국과 한국의 결단과 실행이 중요하다. 군사적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평화협정체결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대북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한

국은 인도적 지원과 경제 교류를 위한 손을 먼저 내밀어야 할 것이다. 2018년 4월 27일과 9월 19일에 남북의 정상들이 만났다. 4.27판문점선언에서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9.19평양공동선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하면서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했다. 이 약속을 실행하는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있을 때 종전선언의 길은 열리게 될 것이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거나 중단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국경을 넘은 협력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정작 남북은 어떠한 협력도 하지 못하고 있다. 남북 정상들이 공동으로 합의하고 선언한 내용들은 지난 3년간 그 어느 것 하나 실현되지 못했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정상들의 합의는 지켜져야 하고 이어져야 한다. 북한이 남한에게 야속할 정도로 비협조적이라고 해도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많다.)함께 생존해야 할 공동운명체이기 때문이다.

인도적 지원

남과 북의 민간교류의 역사는 1995년, 북한 전 국토의 75%가 피해를 입은 세 차례의 홍수와, 극심한 전력난으로 약 33만 명이 아사하는(UN추정) 사상 최악의 식량난으로 일명 '고난의 행군'이 찾아온다. 이에 북한은 국제사회에 인도적 지원을 요청했고, 남한은 동포애를 통한 '인도적 대북지원'으로 남북교류의 장이 열리게 되었다.

인도적 대북지원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의 토대가 되었다. 남북교류를 통한 평화 통일의 가능성을 열었고 2000년, 남북의 정상(김대중, 김정일)이 만나 분단의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 6,15공동선언을 이루어 냈다. 그 후 2007년 10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6.15선언을 실현하기 위해 10.4 공동선언으로 구체화 하였다. 그러나 2008년부터 이명박-박근혜로 이어지는 정권 하에서 남북교류협력은 물론, 대북 인도적 지원도 막혔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관계는 다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 훈

풍을 만나는 듯 했다. 2018년에는 남,북,미 정상들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일로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것도 잠시 북미협상이 결렬되자 남북관계는 경색되었고 인도적지원마저도 끊기게 되었다. 이렇듯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상황에 요동치고 있었다.

인도적 지원의 문제는 정치적, 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법제 화 해야 한다. 통일부에 등록된 60여 민간단체인 북민협(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에서는 인도적 대북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화를 위해 국회에 건의하였다.

그동안 북한은 많은 변화를 겪었고 국방력은 물론 경제력도 자립의 길을 모색하게 되었다. 북한 전역의 휴대폰 사용자수는 5백만으로 추정된다. "학자들은 북한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5M –휴대폰(Mobile phone), 시장(Market), 돈(Money), 자동차(Motor Cars), 중산층(Middle Class)–.이 있다고 말한다. 그들의 가장 큰 변화는 지역 곳곳에 있는 시장이다. 이제는 인도적 대북지원이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그들의 자존심만 건드린다. 북한이 어느 정도 자립하게(국민소득 1천달러) 되었다면 인도적 대북지원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 '다른 방법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서슴없이 말 할 수 있다. 대북지원이 없다는 것은 남과 북이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대북지원이 없는 경제협력, 대북지원이 없는 평화협정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는 대북지원은 긴급구호(코로나 백신, 치료제등)도 필요하지만 복구지원과 개발지원이라는 인도적 지원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하나누리를 통해 자립마을이라는 설계를 농장마을에 제시하고 유상지원을 통해 그들이 스스로 자립하는 길로 가는 것에 함께하고 있다. 매년 그들이 지원받은 금액을 상환하면서 다음단계로 도약하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를 제시하고 의논한다. 예를 들면 농산물(쌀, 옥수수, 콩, 감자 등) 생산을 위한 농기계와 비료를 유상지원 받았다면 다음 단계로는 가공공장을 세워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요청을 하여 작은 공장설립과 기계를 위한 유상 지원을 하였다. 이렇게 그들 스스로가 마을단위로 계획하고 지원요청을 하는 방식의 개발지원은 서로가 상생하는 길이 될 수 있다. 물론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의 성과에는 개발 원조를 통한 북한의 변화와 자립도가 측정될 수 있는 수치들이 나타나야 한다.

국제사회의 개발협력에 대한 개념은 9.11사태 이후 원조 대상 국가의 빈곤 문제와 정치적 불안 문제가 주변국가에 엄청난 후폭풍으로 밀려올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원조의 개념이 달라져 서로가 상생하는 안보의 문제로 여겨지게 되었다. 인도적 대북지원도 오히려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고 상생의 길이다.

철도연결

분단으로 끊긴 한반도 혈맥을 잇는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이 2018년 12월26일 10년 만에 다시 열렸다. 남북철도 연결사업(南北鐵道連結事業, 한반도종단철도, 약칭 TKR)이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단절되어 있는 철도를 연결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0년부터 경의선, 동해선, 경원선-금강산선의 복원이 시작되었지만 완성하지 못하고 중단의 중단을 거듭했다. 극동아시아의 대륙횡단철도도 부산을 기점으로 하는 한반도종단철도(초록색, TKR 경원선-금강산선), TKR 동해선(자주색), 몽골횡단철도(빨간색, TKR 경의선), 만주횡단철도(파란색), 시베리아횡단철도(검은색)들이 서로 연계한다는 계획만을 갖고 있다.

남북철도 연결은 한반도의 지형과 역사를 바꾸는 대장정의 시작이다. 남북교류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기폭제는 물론, 적대적, 대립 관계가 우호적, 상호 관계로 바뀌는 것이다. 남북으로 이어지는 철도는 시베리아를 관통하여 유럽으로 연결된다. 동북아시아와 유럽의 경제를 묶어 내는 엄청난 일이다. 사람과 물류 더 나아가 문화를 연결하는 핏줄과도 같은 것이다.

북한은 3년 전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에 큰 기대를 걸었던 모양이다. 필자가 2019년 초에 북을 방문했을 때 관료가 착공식을 했으니 곧 건설이 시작되겠냐고 언제 시작 되느냐고 물었다, 그 후 몇 달 후에는 착공식만 하고 시작도 못할 바에는 왜 했냐고 비난 하는 소리를 들었다. 우리는 그런 공수표는 안 날린다고 매우 서운해 했다. 이렇게 말만 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도 많다. 민간단체도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물론 이유가 있고 여러 상황이 있어 지키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치밀하지도 않고 약속을 지키는 실천력과 용기도 부족하다.
2011년 10월 13일, 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진시를 잇는 철도 개보수 공사가 5년 만에 끝나고 나진시 두만강역에서 러시아 철도공사 부사장이 참석해 기념식을 가졌다. 하산-나진 구간 개통으로, 부산역에서 모스크바역(야로슬랍스키 역)까지 철도로 연결하는 사업이 종료되었다. 현재 정치적, 행정적 통행허가 문제와, 상품 개발 등 사업적인 절차들이 남아있다.

비핵화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2021년 12월 2일 열린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확대회담에서 양국 국방장관 공식성명을 발표 했다. 공동성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대한 공동의 약속”과 “외교와 대화의 재개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내용으로 한다는 것은 최근까지도 북한 비핵화인지, 한반도 비핵화인지에 대해 오랫동안 북미간에 줄다리기를 해왔는데, 결국 미국이 정책적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197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평화공세의 일환으로 계속 주장해 왔다. 핵 문제는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은 결국 그동안의 선(先) 북한 비핵화 후 평화체제 전략이 더 이상 맞지 않는다는 미국 스스로의 인정이다. 평화가 입구고 비핵화는 출구라는 사실을 인정 하게 된 것이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핵 위협이 사라져야 실현될 수 있다. 북한의 핵 폐기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 정책 폐기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핵 보유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이 핵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안전보장이 포함된 ‘동북아시아 비핵지대(Northeast Asia Nuclear Free Zone)’ 구상을 목표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해나가야 한다.

더 나아가 미국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핵 폐기의 단계적 댓가를 지불하는 길로 들어섰다는 것이다. 하노이 회담 실패를 다시 반복 하는 것은 북한의 핵문제를 방치하는 것일 뿐이고 미국도 북의 핵 위협에 자유로울 수 없다.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것이냐를 의심하는 것은 무의미 하다. 북한은 현제의 핵 폐기에 상응하는 댓가를 받는 다면 못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핵기술을 확보한 북한의 미래의 핵까지 폐기 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핵 과학자라면 쉽게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도 한국도 핵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기에 기화만 되면 핵을 보유하겠다고 목소리를 내는 이유이기도 하다. 서로 신뢰하고 평화 하는 길만이 남아있다.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전쟁 종전과 평화체제 구축, 북미 관계 개선과 긴밀하게 연결된 문제다. 북한이 더 이상 핵·미사일을 개발할 필요가 없는 평화적 환경을 미국과 한국은 만들어내야 한다.

나가는 말

여야 대선 후보들은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을 위한 구체적 구상이 필요하다. 서로를 알아가고 신뢰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교류와 만남이 필요하다. 혹이라도 북한을 흡수 통일의 대상으로, 또는 무력으로 굴복시킬 수 있다는 망상은 버려야 한다. 북한은 핵을 보유한 군사 강국이 되었고 경제력도 우리에 비해 열악하지만 많이 개선되어 자립의 길로 가고 있다.

남과 북은 서로의 장단점을 살리고 보완해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할 민족 공동체이다. 현제 남과 북의 청년들은 기성세대들과는 너무도 다르다. 북한의 청년들을 만나보면 당당하면서도 발랄하다. 무엇에든지 도전하려고 하고 진취적이다. 남쪽에 청년들에게 북에 대한 관심을 갖고 북과 상생할 수 있는 창업을 공모한 것에 심사를 맡은 적이 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필자를 놀라게 했다. 이들이 한반도의 미래들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는 멈추지 말고 지속 되어야한다.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 완화를 이끌어내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종전 선언을 넘어 한반도 평화는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다음 대통령과 정부는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더 이상 주변국들의 눈치를 볼 수 없고 이제는 그런 국력을 갖추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북한과의 경제교류를 통해 상생하는 길로 가야한다. 한반도에서 평화와 대안 경제의 모델을 만들어 인류의 희망 되는 비전을 대선후보자들은 가져야한다. 말과 선언이 아닌 구체적 실천을 할 수 있는 실력과 용기가 다음 대통령에게 절실히 필요하다. 70년이 넘는 분단의 비극을 끊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 더 이상 주저주저 하거나 지체하면 재앙이 올수도 있다.